

## 다산포럼

## 교과서 검정과 국사 교과서

조 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원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심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산권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이념을 획일적으로 강압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일부 국가에서도 교과서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방향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제시해주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검정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즘은 역사학계에서는 뉴라이트 계열에서 편찬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자도 이 논의의 옮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최근 이 교과서를 어렵게 구해서 직접 검토해보았다. 이 교과서는 검정 통과 직후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필

자는 교육부의 지시대로 수정될 교과서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뉴라이트 국사 교과서에는 역사 교과서로는 성립되지 어려운 근본적인 오류들이 눈에 띄었다.

원래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결합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해석은 사관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나열은 결코 역사가 될 수 없다. 특히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법적 가치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사관에 따라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므로 '사관으로 위장된 특정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을 꿰맞추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서술은 집필자들의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유동률은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학계의 보편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기도 했다.

또한, 이 교과서는 그 서술의 과정에서 행위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의 전통과 4·19 이념을 이어받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

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교과서는 교과서로도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교과서의 서술 방향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생각해보더라도 이는 국사 교과서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교과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검정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검정의 책임을 직접 감당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편찬위원회는 자신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교육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은 역사 분야에 있어

서 최고의 실력자들이며, 모든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자들이다.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냉전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친구와 적으로 편파를 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미래를 짊어질 짚은 세대들이 교과서로는 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를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또, 국사 교과서 검정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번 교과서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검정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위원회가 통과시킨 교과서를 스스로가 다시 검정하여 재수정을 명했다.

이로써 교과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검정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검정의 책임을 직접 감당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편찬위원회는 자신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교육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은 역사 분야에 있어

서 최고의 실력자들이며, 모든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자들이다.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냉전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친구와 적으로 편파를 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미래를 짊어질 짚은 세대들이 교과서로는 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를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 NGO 칼럼

## 11월1일 근로정신대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

이 국 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유난히 더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아버지가 일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돼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고, '아버지'라는 이를 한번 평생 불러보지 못한 어느 한 유족의 얘기다.

일제가 폐망하고 해방 후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도 하나님 부모와 가족을 찾아 고향에 돌아왔지만,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데 어느 때부터 코흘리개 어린 마음에도 웬

지 어머니한테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던 모양이다. 어느 날부터 그는 밤에 어머니 곁에 잠들면서 한 손으로는 꾹 어머니 치마 저고리 한 쪽 끈을 손에 쥐고 잠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곁에는 어머니가 어제 저녁 임었던 치마저고리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아들이 잠에서 깨까봐 조용히 그 자리에 치마저고리만 벗어놓은 것이다. 결국 그것이 어머니와 생애 마지막 작별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 몇 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그리고 고이 잠자는 어린 아들을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끊겨야 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찌했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어머니의 빈 치마 저고리만 부여잡고 있었던 그는 또 얼마나 하망했을까. 일제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이렇게 깊게 패여 있다. 올해는 해방 68년이다.

지난해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픈 사연을 듣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이를 기업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다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사건을 포함해 국내에서 제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사건의 당사자를 모두 합하면 고작 5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로 동원된 인원만 자그마치 10만 명이다.

이런 가운데,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우리 사법부 최초 판결이 오는 11월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5세, 일본 소송으로 시작해 장장 14년째 이른 이 재판 역시, 세월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이 원고 2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68년이라는 세월도 부족해, 미쓰비시는 또다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내밀 것인가.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애초 원고 5명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오랜 소송을 겪다 못해 그 사이 5명의 모든 원고가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학우고대며 기다리던 승소 판결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남은 유족이 대신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모두 끝난 것도 아니

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이를 기업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다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사건을 포함해 국내에서 제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사건의 당사자를 모두 합하면 고작 5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로 동원된 인원만 자그마치 10만 명이다.

이런 가운데,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우리 사법부 최초 판결이 오는 11월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5세, 일본 소송으로 시작해 장장 14년째 이른 이 재판 역시, 세월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이 원고 2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68년이라는 세월도 부족해, 미쓰비시는 또다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내밀 것인가.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 아이돌봄서비스기관 통합운영을 위한 제안

이정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내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코자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봄비를 돌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을 하루 6시간 이상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사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2012년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21억원에 연계전수는 6717가정에서 8만1782 연계전수(영아종일제 61가정, 시간제 8만1721연계)를 이용했으나,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33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예산에 5520가정에서 7만5910 연계전수(영아종일제 92가정, 시간제 7만5818연계)를 기록하고 있어, 연말이 된다면 전년도에 비해 약 24%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서비스 만족도,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업의 정체성 문제 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 북구에 사는 A씨(33·여)는 5세인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종일반 하원 후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할 시간제(1시간당 5000원) 아이돌봄비를 구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그 시간 때 아이돌봄비가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새로 운 직장 입사를 포기함.

# 구도심 지역의 A 서비스제공기관은 영아종일제 이용자 가정의 증가로 아이돌봄비 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영아종일제 사업을 축소, 또한 흥보비 예산이 없어 전 직원들이 이용자 가정을 찾기 위해 거리 흥보나 기관 방문을 하며 사업을 추진, 이에 따른 업무 소진으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음. 이에 비해 인구밀집 지역인 B 서비스제공기관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충분하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영아종일제 이용자들을 적극 발굴해야 하나 단순한 전화 신청으로 연계가 쉬운 시간제에 만 치중,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무관심한 서비스제공 기관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여러 사업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운영비를 전용할 생각을 함.

위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 자치구별로 5개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돌봄사업의 정체성의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에 상관없이 자치구별로 5개 서비스제공기관이 별도 운영되는 것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 운영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는 원하는 시간내에 아이돌봄비(현재 343명이 활동)가 없으나 다른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는 아이돌봄비가 대기하고 있다. 통합운영시 이와 같은 아이돌봄비 수급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의 일원화로 예산,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A와 B의 서비스제공기관 사례에서와 같이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이로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전체 사업비에서 운영비(주로 인건비와 행정부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에 유통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광역단위의 선진 '우수사업' 시스템을 전립할 수 있다. 아이돌봄비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문화, 역사탐방 등의 학습연계

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343명의 아이돌봄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복도우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접화, 역량강화 캠프, 소모임, 인터넷카페 운영 등의 광역단위 선진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자치구별로 서비스제공기관과 체계화된 협력기반의 상이성 문제에 대하여 통합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제공의 지역별 편차, 교통접근성, 운영 중단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승계(현재 15명), 업무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하는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이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통합이 필요하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 說

## 전남대 경쟁력 이렇게까지 추락해서야

전남대 학생들의 취업률이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인데 교수들의 연구역량도 타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선 충격적이자 상실감이 끊어졌다.

새누리당 이하재 의원이 최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의 취업률은 47.5%로, 전국 평균 취업률 52.39%보다 무려 4.89% 낮았으며 10개 국립대학 중 끝찌를 기록했다.

전남대 취업률은 최근 4년간 한 번도 50%를 넘지 못한 채 국립대학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학생들의 실력 저조나 지역적인 편견 등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학 측이 산·관·학 등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소홀히 한 데 책임이 크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전체 교수 1174명 중

아무리 가정불화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폐륜 살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간으로서 해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수호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부모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배울려진 교육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성교육에 등한시하다 보니 이런 폐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다.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반인륜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루빨리 이런 사회 병리현상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다.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을 도덕적 가치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학교, 가정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도덕적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집에서는 가족간 대화를 늘려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인식을 넓혀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 無 等 鼓

"다시 시구(始球) 할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두 발로 잘 서 있다는 것을 한국사람들에 보여주고 싶어요."

'티타늄 다리의 천사'로 불린 에릭 킹(한국명 오인호)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는 지난 2001년 4월 5일 두산과 해태의 개막경기에서 열린 잠실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뼈가 굳고 다리가 썩는 선천적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입양